

##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중점법안 4개 통과

- ①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단순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, 이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는 특별절차 근거 마련을 위한 민법(‘**빚 대물림 방지법**’)
- 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,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등 편의 제고를 위한 ‘**출입국관리법**’
- ③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설립기준을 강화하고,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해 동물복지 침해 시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강화한 ‘**동물원수족관법**’
- ④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, 수입, 생산, 판매, 위탁관리 하지 않도록 신고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을 마련한 ‘**야생동물법**’

□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4일 정기국회(제400-13차)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중점법안 4건을 포함한 총 27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.

□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가 모두 자동으로 상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미성년자는 의사표시를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, 생존해 있는 부모가 상속 절차를 모를 경우, 미성년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**빚 대물림 방지법**이라 불리는 ‘**민법 일부개정법률안**’은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 내에서만 상속 빚을 갚게 돼 미성년자 상속인의 **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보호**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□ ‘**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**’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안입니다. 이를 통해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등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

□ 코로나-19 이후 동물원 및 수족관 휴원에 따라, 보유동물 방치와 폐사 등으로 운영관리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.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‘등록기준’ 충족만으로 설립·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이에 ‘**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**’으로 기존 등록제를 ‘허가제’로 전환해 설립기준을 강화하고, 동물복지 침해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
□ ‘**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**’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수입, 생산, 판매, 위탁관리 하지 않도록 신고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을 마련했습니다. 이번 법 개정이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와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.

□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와 예산 정국에서 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와 보완되어야 할 제도를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. 무엇보다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민생을 챙기고,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더 나은 사회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2022. 11. 24.

**더불어민주당**  
 정책위원회 의장 김 성 환